

# 尹, 군정 자금마련 지시했나... 최상목 “동의할 수 없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위헌안질의 野, 지난 3일 밤 메모 지적 최 부총리 “참고사항일뿐 경제 정상궤도 오르면 사임”**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메모에는 ‘계엄군의 군정(軍政)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지시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부총리는 메모의 존재는 이미 밝힌 바 있으나 17일 이 같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받은 문건 내용이) 계엄 관련 해 예비비 등 관련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계엄군사령부가 군정을 이어가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라는 취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해당 문건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실무진이 ‘참고하라’고 준 문건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다”라며 “당시에

경향도 없었고 제가 이미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어볼 의사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

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 생계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

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3%에서 2023년 75%로 증가한 후 올해와 내년까지 3년 연속 75%를 유지했다.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

### 與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 임명 불가” 野 “터무니없는 말장난... 절차 지연작전”

입장차 뚜렷... 탄핵정국 2라운드 예고

여야가 국회 뒤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완료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성을 놓고 이견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 뒤편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해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변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인 체제의 경우 탄핵심판이 인용을 위해서라면 이론상 재판관 만장일치를 이뤄야 한다.

야당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 구성을 완전하게 정리해 추후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3~24일 3인의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고 30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부

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즉각 권 원내대표 주장을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공석인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란다”며 “윤석열의 위법, 위한 내란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이미 다 협의된 내용이고 헌법재판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관련해선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뉴시스

## 경제4단체 “기업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우원식 국회의장 간담회 대외신인도 제고 등 국회 역할 요청 “여야, 기업 지원법안 머리 맞대야”**

경제4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탄핵 정국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4단체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초청했다.

경제4단체 대표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숙고를 거쳐야 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들 70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번 연말에 처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국회에서 통과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긴박한 정치 상황으로 경제계 목소리가 사라졌다”며 “오늘 경제계 속앓이를 말해주면 여야, 정부가 함께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최근 상황에도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있다”며 “성장을 저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거시지표 안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즈니스는 어느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 기업 경영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 모두 민생안정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무쟁점 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준다면 기업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편, 기업의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

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위기는 국민의 삶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목소리를 살피준다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이번 사태 이후 수출업계 중심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 결과 기업들이 가장 애로로 느낀 것은 환율 불안정이었다. 50% 이상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며 “두번째는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기업의 대외활동의 저해가 20% 이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회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20일에 출범한다. 그것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관세폭탄 등을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도 나름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대미 친선 의원외교도 같이 해주면 무역 업계도 상당히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생법안과 세법 개정안 중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이 있다”며 “예를 들면,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전통시장 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상향 등 여러 사항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